

비리 사학 폐교재산 국고귀속 법 발의

유성엽 교문위원장 대표발의... 잔여재산 전액 귀속·사립학교 구조개혁 지원 용도로 활용

사학재단의 비리로 대학이 폐교할 경우, 폐교 대학의 재산을 비리당사자가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하여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의당, 정읍·고창)는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임원 등이 부정, 비리 등으로 폐교될 경우,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고, ▲국고 등으로 귀속된 재산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경영진의 부정, 비리 등으로 대학이 폐교되더라도 비리당사자에게 재산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고로 귀속한 재산은 기금으로 조성되는데, 폐교되는 학교 교직원들의 인건비, 재취업 직업훈련비 등으로 사용되어 폐교 대학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및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표발의에 나선 유성엽 위원장은 "그동안 경영진의 부실한 운영과 비리로 인해 학교가 폐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 현황 청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방문해 식품클러스터 투자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미비로 비리 당사자 또는 그 일가가 학교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잘못된 일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비리 당사자가 재산을 사실상 다시 취득하는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동시에, 폐교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반복되는 비리의 악순환을 끊

고, 사립학교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국민의당, 한국당 2중대로 전략”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국민의당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된 것은 국민의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14일 박재만 원내대표를 비롯한 26명의 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은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 2중대로 전략한 국민의당에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당이 명분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행사하면서 자유한국당 2중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국민의당을 호남대신당, 호남출대당이라 규정짓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북 고창 출신인 김 재판관은 그동안 진보적인 성향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관철에 앞장서 온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민약 인준안이 통과됐다면 호남 출신 최초의 헌법재판소장이 탄생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호남은 물론 전북도민들은 아쉬움을 달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호남출대론을 주장해 왔던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낙마에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한 것이다"며 "더이상 국민의당은 호남출대론을 주장하면서 호남과 전북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군산교육문화회관에 학생수영장 건립

군산교육문화회관 학생수영장이 건립된다.

11일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을 통해 군산교육문화회관 학생수영장 증축이 심의·의결해 통과됐기 때문이다.

군산 학생수영장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수영실기교육과 함께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체험공간 활용, 그리고 지역 장애인,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의 장으로 운영된다.

이날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실에 따르면, 도내 시 단위에 수영장이 없는 곳은 군산 뿐이었지만, 지역주민과 전라북도교육청 등과 꾸준한 간담회를 통해 이와 같은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 의원은 군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시설이 부족하고, 최근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군산지역 엘리트체육 수영선수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전용 수영장 필요성을 지난 2014년 의정활동 시작부터 지난 7월 1회 추경 심사 시까지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그는 도교육청 업무보고와 정책위의 시 군산 학생수영장의 건립에 대해 노력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해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오는 2020년 3월까지 군산교육문화회관(군산시 조촌동 883)가에 총사업비 약 90억원의 예산으로 건물(2,100㎡, 25m 8레인)규모로 학생수영장을 건립한다.

다만, 교육위에서 90억원의 예산 중 주차장부지 매입 비용 13억원의 예산은 군산시와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에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위는 삭감된 13억원의 예산은 군산수영장 시설 개선과 증축에 오롯이 더 쓰이도록 삭감조서를 작성했다.

그회 의원은 "학생 안전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고, 특히 군산지역 엘리트체육 수영선수들이 아쉽게도 학생문화회관의 전용면적이 협소해 50m레인은 아니지만,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수영장 시설이 필요했다"면서 "특히, 교육문화회관의 목적인 평생학습공간의 활용도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취지로 장애인과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레인이 설치된 수영장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박원순 좌파 등록금’ 수사착수

‘MB블랙리스트’ 운영도... 검찰, 공공형사부·공안 2부에 배당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명박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았다. 이미 국정원 댓글부대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공공형사수사부, 공안2부에 맡아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박원순 서울시장 및 좌파 등록금 문건 사건 관련,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관련 등 국정원에서 제출한 수사의뢰서 2건을 송부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11년 11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중복 인물로 규정된 후 보수단체 규탄 집회, 비판 성명 광고, 인터넷 글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부분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권여 행위로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원 전 원장이 아권의 반값 등록금 주장을 비판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한 점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원은 블랙리스트 운영도 수사되겠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는 자체 조사결과 원 전 국정원장 등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의 퇴출 등 압박 활동을 지시하면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조직한 후, 청와대 관련 지시에 따른 교감 하에 80여명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퇴출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정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좌파연예인' 방송출연 중단, 소송사 세무조사, 비판 여론 조성 등 퇴출 압박 활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원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행위 등으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안을 국정원 관련 수사 중인 공공형사부, 공안2부에 맡겨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등을 충실히 검토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시스

안, 김이수·김명수 “원칙으로 판단할 것”

“SOC예산 언급, 당리당락 없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가, 자질면에 문제가 없나에 대해 당원들 각자가 판단할 것"이라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 한 농장에서 농촌 일손돕기 활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에서는 인사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적폐연대', '뺑깡' 발언에 대한 사과 없이는 앞으로 어떠한 절차적 협의도 없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질문에 "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것들은 현역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 후보자의 인준이 담보돼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킬 수 있다는 설에 대해서는 "인사문제는 각자

가 그 역할에 적합한 지 그것만 갖고 따져야 한다"며 "인사 문제에 있어서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정부 여당 주장 아닌가. 오히려 여당에서 이렇게 연계를 시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전북 민심이 악화됐다는 분석에 대해 "국민의당 표결 원칙은 그 분의 고향에 따른 것이 아니다"며 "그분이 얼마나 사법부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지, 자질면에 문제는 없는지 그 기준으로만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안 대표의 전북 방문을 놓고 '호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갖고 시비를 건다', '(예산은) 충분하다', '그렇게 해봤자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등의 비판을 한 것에 "지역예산 문제는 존재감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의당은 야당으로서 지역발전전에 과연 정부의 인이 적합한가, 그 기준으로만 판단한다. 어떠한 당리당락적인 부분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시스